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 I. 검토배경
- II. 재정분권정책의 내용과 추진실적
- III. 설문조사 개요
- IV. 설문조사 결과분석
- V. 신정부의 향후과제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검토배경

-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기조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천명하고 과거에 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른 지방분권의 3대 추진원칙인 선분권 후보완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성 원칙에 의거하여 재정분권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
- 이와 같은 정책방향 하에 참여정부는 14개의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들은 개별 정책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재정분권의 수혜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 수치에 의한 평가가 바람직하나 재정분권정책들은 계량적 분석이 곤란한 정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재정분권정책은 전문가나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따라서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 및 연구원과 실무자인 자치단체의 장 또는 예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재정분권정책의 내용과 추진실적

-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3년 7월 4일 제시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상의 지방재정의 4대 과제별 개선방향과 그 간의 추진실적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세원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기반 확충,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 등을 추진
 -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의 일정분(지방도로 정비)의 이관을 통해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15%에서 18.3%로 인상하는 대신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국고보조금의 정비와 함께 재원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일부사업의 흡수 및 신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 그러나 조세개혁 일환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은 그 추진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둘째, 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법 및 제도에 의한 세수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확대, 탄력세율 적용 활성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체납세의 징수강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
- 이에 따라 원자력세 도입을 통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관련세의 과표현실화를 추진
- 그러나 비과세·감면세액이 지방세수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에 묶여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자치단체는 소극적 입장을 여전히 보임
- 셋째, 지방재정의 운영에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줄이고,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은 범위와 수준을 완화·정비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보조금사업 정비에 의한 자주재원화, 포괄보조금제 운영을 통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 개별승인제도 폐지, 지방조달권한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을 추진
- 이들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한 재원이양과 함께 보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 그리고 지방조달권한 확대 문제는 입법화를 거쳐 2005년부터 추진함

- 넷째,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유인체계를 강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재정운영 및 재정성과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지방재정평가제도) 구축,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재정출납관 독립성 강화, 지방채 발행시 신용평가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 이들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분석제도는 개선을 통해 그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복식부기제도는 시범적용 단체의 단계별 확대를 거쳐 2007년부터 전면적 도입이 이루어짐

〈표 1〉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추진실적

정책 과제 명	주요 추진 실적	추진상태
과제 1 :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법정률 15% → 18.3% 조정('04. 1) • 분권교부세 신설로 18.3% → 19.13% 상향조정('04. 12) •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19.24% 상향 조정('05. 12) 	추진 완료
과제 2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통계·산식 정비(9개 항목, 26개 세항) •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 및 지원기준 구체화 	추진 완료
과제 3 :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및 적용비율기준 시달('04. 5) • 재산세 세율체계 조정 및 지방세법 개정 공포·시행('05. 1) 	추진 완료
과제 4 :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기피시설 및 지자체 유치시설에 대한 과세 기본계획 보고('05. 6)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설('05. 12) 	추진 완료
과제 5 : 국고보조금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정비시안 마련('04. 2) • 재원 이양방안 확정('05. 1,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완료
과제 6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지방재정법 개정('05. 8)에 반영 • 지방예산 편성기준 및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제정(훈령, '05. 7) 	추진 완료
과제 7 : 지방채 발행 승인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방안 마련('04. 7 ~ '05. 6) • 지방재정법 개정('05. 6) 및 시행령 개정·시행('06. 1) 	추진 완료
과제 8 :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개편('04. 1) • 지방양여금법 폐지 법률안 제정·공포('04. 12) 	추진 완료
과제 9 : 지방재정분석가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분석 용역('05. 7 ~ 9) 및 분석지표 확정('05. 11) • 지방재정분석 결과 최종 보고('05. 12) 	추진 완료

- 표 계속 -

정책 과제명	주요 추진 실적	추진상태
과제 10 :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 신설('05. 8) • 복식부기 회계제도 숲 지자체 시험 운영('06) • 자치단체 회계기준(부령) 확장('06. 10) •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훈령) 제정('06. 11), 시행('07. 1) 	추진 완료
과제 11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출 합리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예산편성·집행제도 및 통합지출관제 도입('05. 8) •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05. 12) 	추진 완료
과제 12 :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05. 8) • 투융자 심사 관련 법령 정비('05. 12) 	추진 완료
과제 13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도입 등 중장기조세개혁 방안 검토 중 •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등 관계부처 협의 중 	추진 중
과제 14 : 지방세 비교세 감면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06. 10) 및 관련 법령 개정('06. 12)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추진계획 중 : 시범실시('06 ~ '09), 전면 실시('10) 	추진 중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은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한국지방재정학회 소속 교수 및 연구원) 및 자치단체(자치단체장 또는 예산담당자)임
- 설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14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질문
 - 각각의 정책을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평가하기 위해 재정자율성,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재정투명성, 재정형평성, 지역경제발전 등 7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표 2>)
 - 이 중 각 정책별로 중요한 항목 2~4개에 대해서만 질문(<표 3> 참조)

- 각 평가항목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부정적 1, 부정적 2, 관계없음 3,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의 영향평가를 실시

〈표 2〉 재정분권 평가항목의 정의

평가항목	정의
재정자율성	•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도
재정건전성	•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확보능력에 비추어 재정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어서 재정수지적자와 누적채무가 전반적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
재정효율성	• 주어진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여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재정적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
재정책임성	• 자치단체가 세금이나 예산을 가장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지를 회계 및 성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선 철저히 주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
재정투명성	•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재정정보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는 정도
재정형평성	•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정도
지역경제발전	• 지역의 고용, 생산,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표 3〉 분권정책별 평가항목 구성

분야	과제명	재정자율성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재정투명성	재정형평성	지역경제발전
지방세	과제 3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					○	○
	과제 4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						○
	과제 13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	○
	과제 14 지방세 비교세 감면 축소	○			○	○		
이전재원	과제 1: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조정	○					○	
	과제 2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			○	
	과제 5 국고보조금 정비	○		○				
	과제 8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		○				
예산회계	과제 6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보완	○	○	○				
	과제 10: 자치단체 복식부회계제도 도입		○		○	○		
	과제 11: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출 합리성 확보		○	○		○		
재정운영	과제 7: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개선	○	○	○				
	과제 9 지방재정분석기능 강화		○		○	○		
	과제 12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		○	○		

- 최종 설문분석은 기간 내에 회수된 51부(전문가 80부 배부 30부 회수, 자치단체 246부 배부 21부 회수)를 대상으로 함
 - 설문분석은 재정분권정책별 분석, 평가항목별 정책순위 분석, 평가항목별 분권정책 종합분석으로 구분함
 - 분권정책별 분석은 각 문항별 집단(전문가와 자치단체)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t 검증을 실시



설문조사 결과분석

■ 분야별 재정분권정책 평가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은 구분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세, 이전재원, 예산회계제도, 재정운영 등 네 분야로 나누어서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야별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표본집단별 평균과 차이 및 그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하여 평가함
- 지방세 분야
 -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재산세 세율체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형평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이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골프연습장시설을 추가('04)하고, 주민기피시설 및 지자체 유치시설에 대한 과세 기본계획을 보고하였으며('05. 6),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05. 12)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을 현실화('06)하는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지방세 신세원확대 노력은 전문가 및 자치단체 모두 재정자율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좋은 평가를 내렸음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등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이 검토 중이고,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임. 이 정책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문가 집단은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데 비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임
-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지방소비세 및 지방특별소비세 도입이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를 나타내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데 비해, 자치단체들의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함
- 또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의 확충이 재정자율성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고('06. 10) 관련 법령 개정('06. 12)과 아울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비과세 감면 축소는 지방의 재정자율성, 재정책임성 및 재정투명성을 다소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
- 특히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은 전문가들 보다 재정책임성 및 투명성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다소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지방세 분야 정책평가

정 책	평 가 항 목	표 본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집 단 별 차 이 분 석	
					차 이	t
과제3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재정지율성	전문가	3.07	1.08	0.26	0.89
		자치단체	2.81	0.93		
	재정형평성	전문가	2.87	0.90	-0.23	-0.90
		자치단체	3.10	0.89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2.93	0.64	0.22	1.10
		자치단체	2.71	0.78		
과제4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재정지율성	전문가	3.47	0.63	-0.10	-0.48
		자치단체	3.57	0.93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3.33	0.71	-0.43	-2.13**
		자치단체	3.76	0.70		
과제3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재정지율성	전문가	3.07	0.98	-0.60	-2.38**
		자치단체	3.67	0.73		
	재정형평성	전문가	2.63	0.81	-0.84	-3.55***
		자치단체	3.48	0.87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2.93	0.94	-0.59	-2.32**
		자치단체	3.52	0.81		
과제4 지방세 비교세 감면 축소	재정지율성	전문가	3.37	0.61	0.13	0.66
		자치단체	3.24	0.77		
	재정책임성	전문가	3.30	0.70	-0.32	-1.50
		자치단체	3.62	0.80		
	재정투명성	전문가	3.27	0.69	-0.35	-1.81*
		자치단체	3.62	0.67		

주: 매우 부정적 1점, 부정적 2점, 관계없음 3점, 긍정적 4점, 매우 긍정적 5점

● 이전재원분야

- 지방교부세 인상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는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15%에서 18.3%로 조정하였고('04. 1), 분권교부세 신설로 동 비율을 18.3%에서 19.13%로 상향조정하였으며('04. 12), 2005년 말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다시 19.13%에서 19.24%로 상향 조정('05. 12)

-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교부세 인상과 관련한 정책들이 재정자율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동 정책이 재정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한편 재정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동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3.67)와 자치단체(2.81)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전문가들의 경우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 재정형평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았는데 비해 자치단체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통계 및 산식을 정비(9개 항목, 26개 세항)하였고, 특별교부세 규모의 축소(9.09% → 4.0%) 및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증액교부금제도도 폐지
-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은 재정효율성과 재정형평성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자치단체는 재정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 정비와 관련하여 2004년 2월에 정비시안을 마련하였고, 재원 이양방안의 확정 및 분권교부세 신설이 2005년 1월에 이루어짐
-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관련 정책을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였을 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특히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동 정책이 재정자율성을 오히려 크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방양여금제도의 경우 그 성격과 기능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개편('04. 1)함과 동시에 지방양여금법을 폐지('04. 12)

- 이러한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와 관련한 정책의 평가도 전문가 집단과 자치단체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문가들의 경우 이 정책이 재정자율성(3.07)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재정효율성(2.67)을 떨어뜨린 것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3.48)과 효율성(3.4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임

〈표 5〉 0전재원 분야 정책평가

정 책	평 가 항 목	표본집단	평 균	표준편차	집단별 차이분석	
					차 이	t
과제 1: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재정자율성	전문가	3.07	0.83	0.45	1.72*
		자치단체	2.62	1.02		
	재정형평성	전문가	3.67	0.66	0.86	3.34***
		자치단체	2.81	1.17		
과제 2: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재정 형평성전문가	재정자율성	전문가	3.60	0.56	0.17	0.82
		자치단체	3.43	0.93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3.23	0.73	-0.43	-1.83*
		자치단체	3.67	0.97		
과제 5: 국고보조금 정비재정 자율성전문가	재정자율성	전문가	2.90	0.92	0.28	0.94
		자치단체	2.62	1.20		
	재정형평성	전문가	2.73	0.91	-0.12	-0.41
		자치단체	2.86	1.24		
과제 8: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재정자율성전문가	재정책임성	전문가	3.07	0.87	-0.41	-1.47
		자치단체	3.48	1.12		
	재정투명성	전문가	2.67	0.84	-0.81	-3.23***
		자치단체	3.48	0.93		

● 예산회계분야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기준경비를 자율화하고('03. 7),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05. 8)함과 아울러 지방예산 편성기준 및 예산과목 구분과 관련한 훈령을 제정('05. 7)

- 이 정책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비해,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자치단체 간에 상반된 견해가 나타남
- 전문가 집단은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폐지가 낭비성 내지는 선심성 예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데 비해,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여 재정자율성 향상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관련 정책으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05. 8),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지자체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하였으며, 회계기준(부령) 확정('06. 10)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훈령)을 제정('06. 11)하고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였음
- 현금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정부회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문가와 자치단체 모두 재정건전성, 재정책임성 및 재정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여 높은 평균점수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였고, 현행 관서별 지출원이 지출하던 것을 통합지출관의 일괄지출로 개선하는 통합지출관제를 도입하였으며('05. 8),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05. 12)하였음
- 이러한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노력은 재정건전성 및 재정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재정투명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함

〈표 6〉 예산회계 분야 정책평가

정 책	평 가 항 목	표 본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집 단 별 차 이 분 석	
					차 이	t
과제 6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보완 재정자율성전문가	재정자율성	전문가	3.73	0.74	0.26	1.17
		자치단체	3.48	0.81		
	재정형평성	전문가	2.80	0.81	-0.63	-2.93***
		자치단체	3.43	0.68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2.90	0.66	-0.48	-2.34**
		자치단체	3.38	0.80		
과제 10: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재정자율성	전문가	3.83	0.59	0.12	0.68
		자치단체	3.71	0.64		
	재정형평성	전문가	3.87	0.63	-0.13	-0.71
		자치단체	4.00	0.71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3.90	0.55	-0.15	-0.82
		자치단체	4.05	0.74		
과제 11: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재정건 전성전문가	재정자율성	전문가	3.43	0.73	-0.09	-0.47
		자치단체	3.52	0.60		
	재정형평성	전문가	3.23	0.57	-0.10	-0.52
		자치단체	3.33	0.80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3.70	0.47	-0.25	-1.85*
		자치단체	3.95	0.50		

● 재정운영분야

-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04. 7 ~ '05. 6),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를 설정·통보하였음
- 이러한 지방채발행 승인제도의 개선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건전성 및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은 재정자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하는 지방재정분석은 2005년에 분석지표의 대폭적인 확대 및 분석방법의 개선 등으로 그 기능을 강화
 - 이러한 노력은 재정건전성, 재정책임성 및 재정투명성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분석대상인 자치단체에 비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대조를 이루었으며, 평가항목 중 재정투명성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
-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노력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05. 8), 재정공시제도 도입('06. 1), 투융자 심사 관련 법령 정비('05. 12)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은 전문가와 자치단체 모두 재정건전성, 재정책임성 및 재정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함
 - 특이할 사항은 세 가지 평가항목 모두에서 전문가보다 자치단체장 및 담당 공무원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임

〈표 7〉 재정운영 분야 정책평가

정 책	평 가 항 목	표 본 집 단	평 균	표 준 편 차	집 단 별 차 이 분 석	
					차 이	t
과제 7: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재정자율성	전문가	3.87	0.82	0.39	1.68*
		자치단체	3.48	0.81		
	재정형평성	전문가	3.23	0.73	-0.20	-0.90
		자치단체	3.43	0.81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3.23	0.57	-0.34	-2.05**
		자치단체	3.57	0.60		
과제 9: 지방재정분석기능 강화	재정자율성	전문가	4.13	0.43	0.42	2.21**
		자치단체	3.71	0.90		
	재정형평성	전문가	4.23	0.43	0.66	4.01***
		자치단체	3.57	0.75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4.27	0.45	0.46	2.72***
		자치단체	3.81	0.75		
과제 12: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재정자율성	전문가	3.63	0.72	-0.22	-1.13
		자치단체	3.86	0.65		
	재정형평성	전문가	3.87	0.57	-0.18	-0.94
		자치단체	4.05	0.80		
	지역경제발전	전문가	4.03	0.49	-0.30	-2.00**
		자치단체	4.33	0.58		

평가항목별 개별 분권정책 순위

- 다음에서는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평가항목별 결과를 평균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이를 통하여 그간 추진된 정책을 평가함과 아울러 향후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그리고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정자율성,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재정투명성, 재정형평성, 지역경제발전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하여(분권정책 종합) 각 과제별 해당 항목점수의 평균(과제평균)과 비교하여 분석함

● 재정자율성

- 재정분권 정책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전체 14개 과제 중 재정자율성과 관련성이 높은 9개 과제를 평가해 본 결과 3개 과제만이 평균 3.5를 넘어 미약하나마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이 중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의 개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예산편성 지침의 폐지가 그 다음으로 재정자율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비해, 세 개 과제는 3.0에도 미달하여 재정자율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의 정비는 재정자율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정책으로 평가됨

〈표 8〉 재정자율성

순위	과 제 명	평균점수	전문가	자 치 단 체
1	과제 7: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개선	3.71	3.87	3.48
2	과제 6: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보완	3.63	3.73	3.48
3	과제 4: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3.51	3.47	3.57
4	과제 13: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3.31	3.07	3.67
5	과제 14: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3.31	3.37	3.24
6	과제 8: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3.24	3.07	3.48
7	과제 3: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2.96	3.07	2.81
8	과제 1: 지방교부세 법령을 단계적 상향 조정	2.88	3.07	2.62
9	과제 5: 국고보조금 정비	2.78	2.90	2.62
	과 제 평 균	3.26	3.29	3.22

●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을 재정수지적자와 누적채무가 전반적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때 주요 분권정책을 재정건전성 기준에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소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
- 특히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노력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표 9〉 재정건전성

순위	과 제 명	평균점수	전문가	자 치 단 체
1	과제 9 : 지방재정분석기능 강화	3.96	4.13	3.71
2	과제 10 :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3.78	3.83	3.71
3	과제 12 :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3.73	3.63	3.86
4	과제 11 :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	3.47	3.43	3.52
5	과제 7 :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개선	3.31	3.23	3.43
6	과제 6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보완	3.06	2.80	3.43
	과 제 평 균	3.55	3.51	3.61

●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재정효율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정책도 평균점수가 3.5에 미달하는 등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고보조금 정비와 관련한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표 10〉 재정효율성

순위	과 제 명	평균점수	전문가	자 치 단 체
1	과제 2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3.41	3.23	3.67
2	과제 7 :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개선	3.37	3.23	3.57
3	과제 11 :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	3.27	3.23	3.33
4	과제 6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보완	3.10	2.90	3.38
5	과제 8 :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3.00	2.67	3.48
6	과제 5 : 국고보조금 정비	2.78	2.73	2.86
	과 제 평 균	3.16	3.00	3.38

● 재정책임성

- 재정책임성과 관련하여 네 개의 분권정책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재정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재정책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됨
- 이에 비해 재정운영 투명성 건전성 확보노력과 복식부기회계제도는 두 집단으로부터 모두 재정책임성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1〉 재정책임성

순위	과 제 명	평균점수	전문가	자 치 단 체
1	과제 9 : 지방재정분석기능 강화	3.96	4.23	3.57
2	과제 12 :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3.94	3.87	4.05
3	과제 10 :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3.92	3.87	4.00
4	과제 14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3.43	3.30	3.62
	과 제 평 균	3.81	3.82	3.81

● 재정투명성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은 재정투명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5개 과제에 대해 재정투명성을 평가한 결과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노력이 4.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분석 기능을 강화한 것도 4.08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음

〈표 12〉 재정투명성

순위	과 제 명	평균점수	전문가	자 치 단 체
1	과제 12 :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확보	4.16	4.03	4.33
2	과제 9 : 지방재정분석기능 강화	4.08	4.27	3.81
3	과제 10 :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3.96	3.90	4.05
4	과제 11 :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	3.80	3.70	3.95
	과 제 평 균	3.88	3.83	3.95

● 재정형평성

- 참여정부 기간 중 추진된 재정분권정책들은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이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관련정책들이 형평성 개선과는 무관하게 정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표 13〉 재정형평성

순위	과 제 명	평균점수	전문가	자 치 단 체
1	과제 2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3.53	3.60	3.43
2	과제 1 :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조정	3.31	3.67	2.81
3	과제 13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98	2.63	3.48
4	과제 3 :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2.96	2.87	3.10
	과 제 평 균	3.20	3.19	3.20

● 지역경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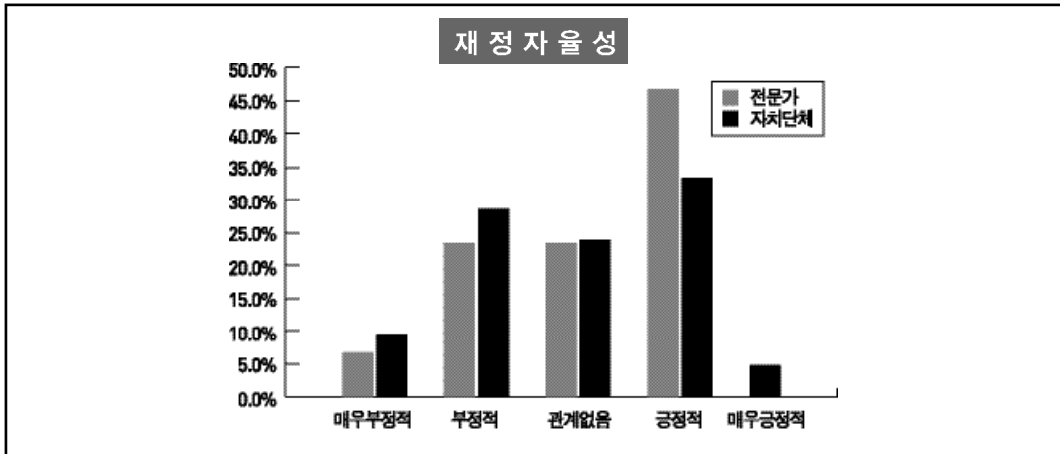
-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평가할 때 재정분권정책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
- 지방세 신세원 확대 정책이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 국세·지방세 조정이나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은 지역경제발전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함
- 재정분권정책을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표 14〉 지역경제발전

순위	과 제 명	평균점수	전문가	자 치 단 체
1	과제 4: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3.51	3.33	3.76
2	과제 13: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3.18	2.93	3.52
3	과제 3: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2.84	2.93	2.71
	과 제 평 균	3.18	3.0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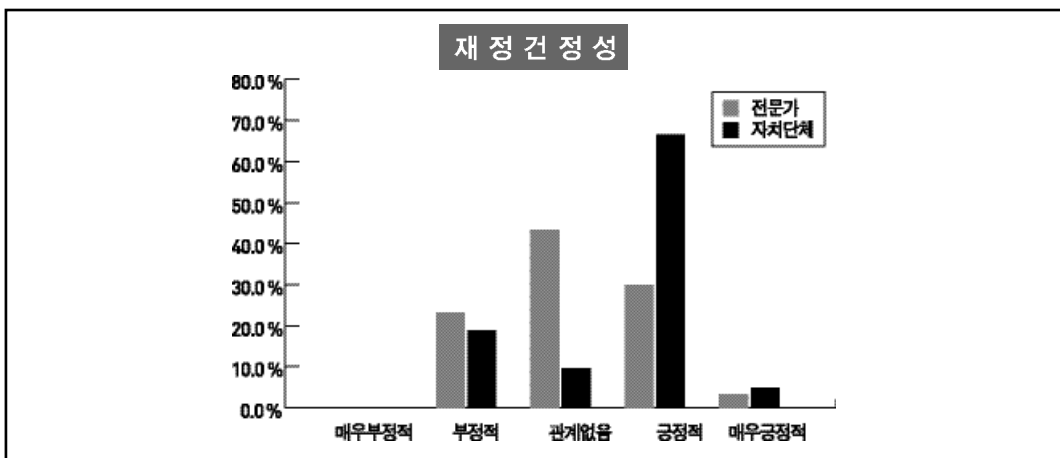
■ 평가항목별 분권정책 종합평가

-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분권정책을 평가항목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재정자율성 종합평가
 - 재정자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문가(평균 3.1)들이 자치단체(평균 2.95)에 비해 약간 긍정적 평가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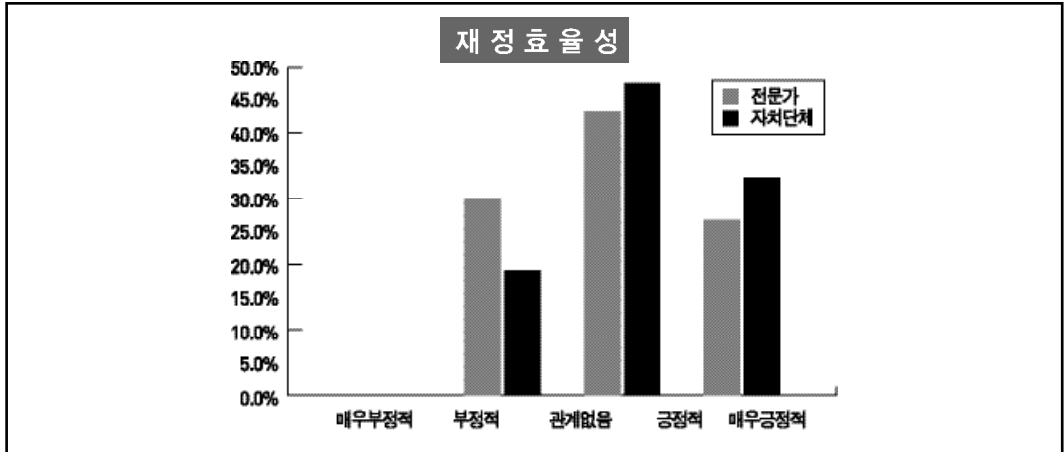
● 재정건전성 종합평가

-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비슷하였으나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은 71.5%가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하여 대조를 이룸
- 이러한 결과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협의의 건전성으로 재정적자 및 누적채무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비해,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은 낭비성 또는 선심성지출 등의 측면에서 건전성을 파악하여 평가한 때문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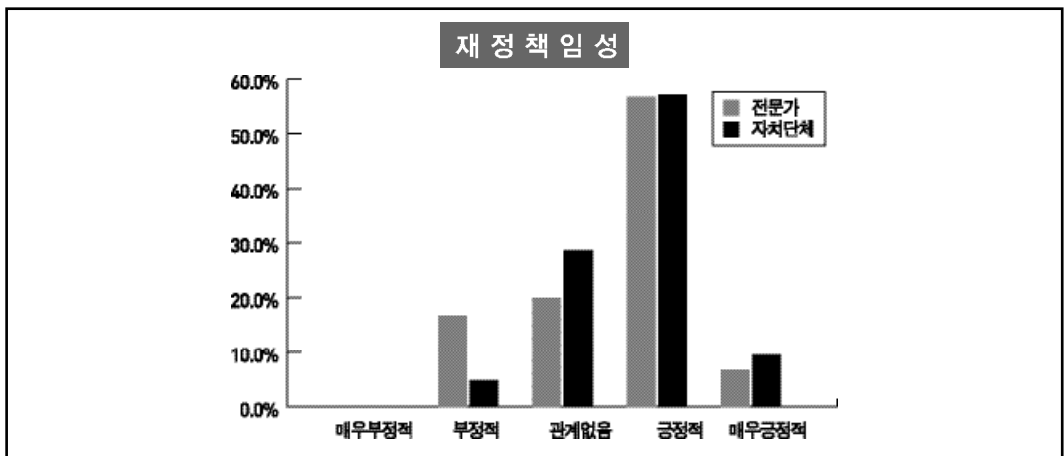
● 재정효율성 종합평가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평균 2.97)들에 비해 자치단체(평균 3.14)에서 약간 높은 평가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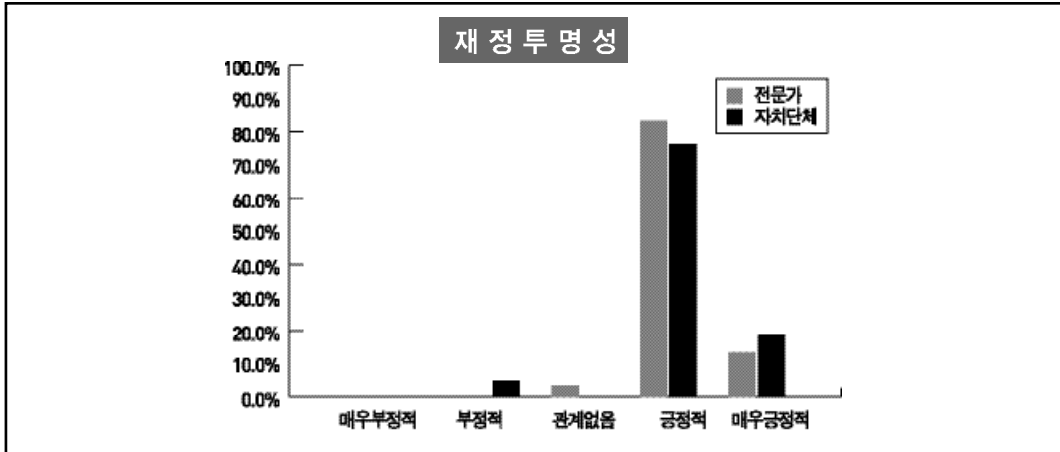
● 재정책임성 종합평가

-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와 자치단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자치단체(평균 3.71)에서 전문가(평균 3.53)보다 좋은 평가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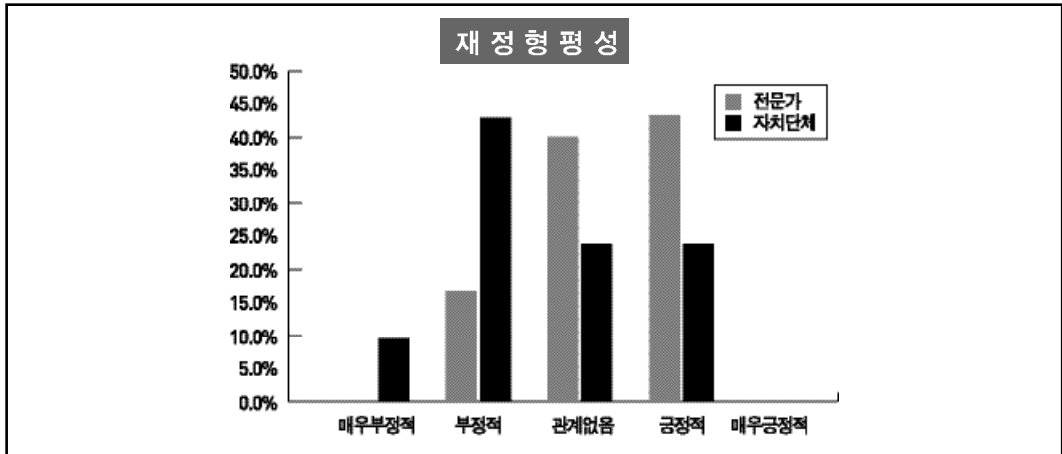
● 재정투명성 종합평가

-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거의 모든 응답자가 긍정적 내지는 매우 긍정적 인 것으로 평가하여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전문가 4.10, 자치단체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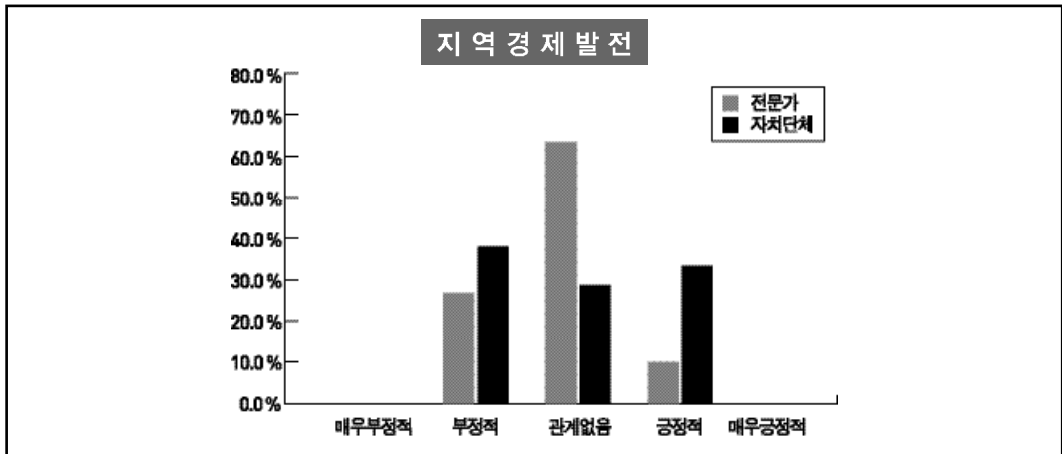
● 재정형평성 종합평가

- 재정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평균 3.27)하는데 비해, 자치단체는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평균 2.62)를 보여, 두 집단 간 평가가 가장 크게 엇갈리고 있음
- 이것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정분권 정책을 통한 재정형평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됨



● 지역경제발전 종합평가

-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은 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가(평균 2.83)들의 경우 자치단체(평균 2.95)에 비해 부정적 비율이 높았음





신정부의 향후과제

-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에 중점을 두었는데 비해, 신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재정분권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함
-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지방예산편성 지침 폐지, 기준경비 항목의 축소,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유지하되, 지방의 전략적 자원배분이나 자율적 학습능력 강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특히,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는 재정자율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세출구조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일반보조금(general grant) 중심의 보조금제도 구축이 필요
 - 그리고 재정분권 정책의 체계적 추진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하였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통폐합 또는 역할의 재정비 필요
 - 향후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수요팽창 요인(교육, 경찰, 고령화·저출산 대책)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의 추가적 지방이양이 불가피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지방간의 자원배분 체계 재정립

-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유도하는 장점을 지닌 반면, 여전히 재정운영의 탄력성 저하, 적기집행 애로 및 행정절차의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되므로 이러한 측면의 개선방안 마련

●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은 전반적으로 재정효율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예산절감 등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의 필요성은 높은 상황
- 그러나 단기 성과위주의 예산절감 정책은 당초예산의 과대편성 또는 눈가림식 편법 예산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심성·낭비성 재정비효율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상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

● 지방세 중심 세제개편

-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세의 확충이 재정자율성, 형평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세입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조세체계를 현재의 국세중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위상이 더욱 신장되도록 구조변화 모색
- 지방세 역할의 강화문제는 현재의 재정분권 상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 자치단체와 주민의 재정책임성 고취, 세원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그리고 경제발전 및 사회민주화 정도 등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지방세의 가격기능 및 지방의 과세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 비과세 감면의 축소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 내로 흡수하고 세입·세출과 동일하게 편성·심의·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투명성과 재정효율성 확보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 균형발전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분권정책도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역의 재정여건 차이(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를 감안하여 재정지원을 차별화할 수 있는 지방재정제도를 모색하여야 함
- 특히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 및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분을 통합하여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가칭 지역균형교부금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음

● 재정운영 책임성·투명성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참여정부가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지방재정분석, 복식부기회계제도,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통합지출관제도, 사업예산제도 등)에 대한 높은 평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도운영의 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업별예산제도는 현실적 한계로 핵심적 성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가산정의 체계화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조직·사업단위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성과평가를 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함

내용문의 : 이 상 용 선임연구위원(02-3488-7377, lsy@krila.re.kr)
하 능 식 수석연구위원(02-3488-7330, nsha@krila.re.kr)

「자료 회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법률 제38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설립이래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인사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당 연구원은 유익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회원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자료회원 가입방법

당 연구원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02-3488-7370)로 전송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자료회원 가입안내)에서 양식을 Down 받아 작성하시고 메일(leeyong@krila.re.kr)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기존 회원은 회비 만 납부)

2.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일반회원	개인회원	30,000원	지방행정연구,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지로납부: 지로용지발송(지로 번호 7630619)
	기관회원	50,000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100,000원	지방행정연구,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집,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은행송금: 국민은행 367-01-0044-581 (예금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회원	150,000원		

3.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지식정보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

「지방행정연구」원고 모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관련 전문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지방행정연구」는 1986년 7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관련 분야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연구지 모집분야 :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균형발전

2. 연구지 발간일정 : 연 4회 발간

— 2008년 9월호(통권 제74호), 2008년 12월호(통권 제75호)

— 2009년 3월호(통권 제76호), 2009년 6월호(통권 제77호)

3. 논문접수일정 : 연중 수시접수

4. 논문제출 방식 : E-mail로 제출 (local@krila.re.kr)

5. 논문작성 방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의

「지방행정연구지 기고안내」 참조

6.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연구지원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1 / F. 02-3488-7305 / E. local@krila.re.kr



<http://www.krila.re.kr>